사 회

5명 모여 식사했다가… 또 집단감염

6월들어 이틀새 26명 코로나 확진… 지인모임發 확산 도 "미확인 감염 많아… 최근 방역 의식 옅어져 걱정"

제주지역에서 또 다른 집단 감염 사 태가 터졌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이 새로운 집단감염 사태를 키운 것으 로 나타나면서 옅어진 방역 의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14명 (1043~1056번)이 코로나19에 감염 된 데 이어, 2일 오후 5시 기준 12명 (1057~1068번)이 확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 는 1068명으로 늘었다. 또 6월 들어 채 이틀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26 명이나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틀 사이 확진 판정을 받은 26명 중 7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상습절도 50대 징역 2년

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했다고 2일 밝혔다.

넘겨졌다.

은 혐의도 있다.

5명은 타 지역 감염자의 접촉자, 1명 은 수도권 방문자인 것으로 조사됐 다. 나머지 13명은 감염 경로가 드러 나지 않은 확진자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스스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다.

특히 지인 모임을 매개로 한 새로 운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에 비상 이 걸렸다. 식사 모임 참석자부터 시 작한 감염이 동료와 그 가족에게 퍼 져 현재까지 총 7명이 확진 판정을

집단 감염 경로를 보면 지난달 30 일 1026번이 첫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026번과 함께 식사를 한 1037번과 1038번, 1043번, 1045번 등 4명이 잇따라 감염됐다. 이후 식 사 참석자와 접촉한 직장 동료와 가 족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 5명은 친구 사이로 지난달 26일 제주시 애월읍 노라바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 으로 조사됐다.

도방역당국은 이들이 마스크를 벗 고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는 도중 비 말이 많이 발생해 감염이 이뤄진 것 으로 추정했다. 또 도방역당국은 이 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 반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존 연쇄 감염 집단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2일 양성 판정을 받은 1063번은 제주시 지인 모임 확 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로써 제주시 지인 모임을 연결고리 로 한 확진자 수는 총 10명으로 늘었

다. 제주시 지인 모임 집단 감염은 광주·전남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도 민이 코로나19에 걸린 뒤 추가 전파 로 이어진 사례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청 직장어린이 집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 돼 공직 사회가 추가 전파로 이어지 지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은 원아들을 모두 귀 가시킨 상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장은 "1일에도 지인이나 가족간의 접촉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를 확 인했다"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 작되기 전 지역 사회의 전파 확산을 최대한 저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 인 만큼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사 자리는 최대한 피하고, 개인 방역수 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 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유·초 1~2학년 교사 88% "백신 맞겠다"

전교조 설문조사 결과 "아이들 안전위해 접종"

오는 7일부터 도내 30세 이상 유치 원과 초등학교 1·2학년 교사를 대상 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 되는 가운데 수업 공백 및 교사의 안 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 주지부는 2일 도내 유치원과 초1·2 학년 교사 대상 백신 접종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교사의 접종이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만 으로 교사들은 백신 접종을 선택하 고 있다"며 접종 후 회복될 때까지 공가 및 병가 사용의 적극적인 권장 과 수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

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이뤄진 설문조사 에 357명의 교사(유치원 100명, 초 1 139명, 초2 118명)가 참여했으며 이 중 87.7%가 백신 접종 의향을 밝

백신 접종을 결정한 이유(복수 선 택)는 '교사로서 의무감(72.1%)' '집단면역의 필요성(52.7%)' '확진 자 증가로 인한 불안(22.5%)' '사회 적 비난(13.7%)' 순으로 나타났다.

접종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들 은 미접종 이유(복수 선택)로 '부작 용(82.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어 병가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점 (15.2%)과 대체 강사 부족(15.2%)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유흥업주에 뇌물 받은 경찰간부 입건

소속 경찰서 직위해제 조치

현직 경찰이 유흥주점 업주에게 돈 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도내 모 경찰서 소 속 A경위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와 올해 사이 제주시 소재 유흥주점 업주 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A경위에 대한 '구 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졌지만, 법 원에서는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 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A경위가 소속된 경찰서 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A경위의 직위를 해제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 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의 연도별 징계 현 황을 보면 2017년 20건, 2018년 4건, 2019년 5건, 지난해 4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직무태만 11건, 품위 손상 등 9건, 성비위 5건, 음주운전 5건 등의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사 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 14 명, 경감 8명 등이다. 송은범기자

"확충 없는 공공의료 계획안 폐기하라"

의료영리화저지본부 기자회견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 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준)는 2 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공공의 료 기본계획안 전면 폐기하라"고 촉 >> 사진

이들은 "정부는 2일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 료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심 의·발표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정 부가 내놓은 계획안은 코로나19 속 공공의료 부족으로 한국사회가 겪는 위기와 비극에 비춰 극히 부족한 수



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계획안이 다 지켜 진다고 해도 현재 8.9%인 공공병상 은 5년 후 9.6%에 불과한 상황"이라 며 "17개 시·도 중 공공병원이 없거 나 한 개에 불과한 울산, 광주, 대구, 인천에 의료원을 설립하고, 부산 침 례병원과 제주 영리병원 부지를 매 입해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며 공 공병상 확대를 요구했다. 송은범기자



제주서 즐기는 낚시체험 2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인근 바닷가를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전통 대나무 낚시체험을 하고 있다.

■ 제주경찰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 한 달

검거… 2억여원 환수 조치

제주경찰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선 포한지 한 달여 만에 피의자 44명을 검거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집중단속 기간인 지난 4월 26 일부터 5월 31일까지 보이스피싱 피 의자 4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 편취한 현금 수거책이었다. 이들 대

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일으킨 피해 는 약 5억원에 달했으며, 경찰은 이 중 2억400만원을 압수한 상황이다.

최근 구속된 4명은 모두 금융기관 혹은 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 부터 28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부분은 인터넷 등에서 고액 아르바 이트를 찾다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 로, 나이는 20~30대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 방한 공로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 례도 늘고 있다. 올해(지난달 27일 기준) 들어 8명이 보이스피싱 피해

만감류 매달기! 다인 귤고리

상담 및 문의 054-652-3725, www.dainfine.com

를 예방하거나 검거에 기여, 총 530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는 2019년 3건·70만원, 2020년 3건·90 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2억 400만원 중 5900만원은 피해자에게 환수했고, 나머지 금액도 조속히 환 수 조치할 예정"이라며 "단속 기간 이 끝나는 오는 30일까지 경찰 인력 등을 총동원해 범인 검거뿐만 아니 라 범죄수익금까지 끝까지 추적해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